

복지국가는 사교육 과잉 문제를 풀 수 있나

Can Welfare States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이신용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hinyong Lee(sybremen@gn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 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 중심어 : | 복지국가 | 소득 재분배 | 사교육 | 사교육비 | 임금 격차 |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n Korea as a way to compare the shadow educ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the trend of increasing shadow education costs has not stopped. The excessive use of shadow education is definitely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But university entrance is not the only concern. In our country, the meaning of univers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tandard of future life. Therefore,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is a reasonable choice by parents or students to ensure a stable future. The belief that the future life can be stabilized when you go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the reality in the labor market, which reflects this belief, is the essential cause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Advanced welfare states such as Sweden and Germany provide hope for our nation. There are shadow education in these countries, too. However, the importance is not so great and its roles are not necessarily directly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guarantee the life of all members of society at a certain level.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s not the admission system but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 keyword : | Welfare State | Income Redistribution | Shadow Education | Shadow Education Costs | Wage Differential |

* 이 연구는 2016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연구교수 과제임.

접수일자 : 2018년 01월 05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31일

교신저자 : 이신용, e-mail : sybremen@gnu.ac.kr

1. 서론

인간은 자신과 같은 생물학적 존재를 재생산하면서 종족을 보존한다. 이때 앞선 세대는 자신의 생활 경험을 후 세대에게 전수한다. 교육은 이와 같은 사회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다[1]. 이와 유사하게 Peters도 교육은 가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전수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2]. Deywe와 Peters의 교육에 대한 정의에서는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 재생산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교육이 앞선 세대의 생활 경험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하는 수단이라면 공적인 교육 기관뿐 아니라 사적인 교육 기관도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경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의 성격 측면에서 바라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 구분은 가능하다. 최상근 외는 각 급 학교에서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을 사교육으로 정의한다[3]. 이정연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 및 특기적성 활동은 사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과교육을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학원, 개인 및 그룹과의,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을 받는 교육활동으로 사교육을 정의한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보충교육을 의미한다. 한편, 사교육비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5]. 따라서 사교육비는 학원수강, 그룹 및 개인과의, 방문 학습지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6].

공교육과 사교육은 협력이나 대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둘 사이는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협력 관계라는 것은, 공교육 제도에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사교육 제도를 통해 공교육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학습 도움을 얻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사교육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행해지는 성적 평가에서 좋

은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때 사교육과 공교육은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된다. 이 때 사교육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초·중·고학생의 열 명 중 일곱 명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5]. 그 결과 한해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규모도 매우 크다. 2009년 20조 6천억 원이 지출된 이후 조금씩 줄고 있지만 2016년에도 18조 1천억 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5]. 2016년 정부 예산의 4.68%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 이 비용의 지불 주체는 가계이다. 대부분은 학부모의 부담이다. 사교육비는 학부모에게 이중부담을 준다. 핵가족화로 자식들의 부양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부모는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도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과 동시에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학부모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7]. 한편,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히 최상위 소득 가구와 최하위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는 매우 크다. 결국 사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학생 개인과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목적은 적성 개발이 아니라 성적 향상이다. 따라서 학습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사교육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 과잉 현상은 인적 자원 개발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교육 과잉 현상은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사교육비로 낭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요인, 사교육비 규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경향, 학업성취도와 사교육과의 관계 등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김혜숙 외는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와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8]. 송성숙 외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9].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운옥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노후 준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7]. 학령기 자녀를 둔 가계의 소득이 높으면 교육 소비 욕구가 크고, 교육 소비 욕구가 노후 준비를 위한 지출을 줄여서 노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중산층 주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산층이 사교육에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국가 전체 사교육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황성희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산층이 공교육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10]. 우리나라 중산층은 공교육을 불신해서 사교육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면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수험제도 때문에 공교육의 영향력도 인정한다. 결국 중산층에게 사교육은 공교육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안선희는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한 과거 정부들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 왔다고 분석했다[11]. 정부는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 입학 전형 방식에 있다고 보고, 대학 입학 전형에 학교생활 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공교육 강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내신 반영 비율을 강화한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 사교육비 지출이 내신 등급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11][12]. 안선희는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은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지 못 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증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수정도 사교육 참여 요인으로 학력과 학벌주의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13].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교육 과잉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14-16].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적다. 특히 복지국가나 사회보장 제도를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제시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김용일은 공교육의 강화와 사교육의 약화를 위해 학벌주의 완화와 능력에 따른 고용 행태, 국가의 지출 확대, 인간 교육과 지식 교육의 병행을 사교육 과잉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17]. 하지만 연구자 스스로 밝혔듯이 사회복지가 어떻게 약화된 공교육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17]. 김정년과 김안나는 사교육과 복지지출 상관성을 분석하면서 복지국가의 확대가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8]. 하지만 연구자들 스스로 연구의 한계로 지적한 것과 같이 어떤 사회복지 제도가 사교육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가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현상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기능과 관련해서 제시하면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특히, 사교육 과잉 현상과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의 연관성에 집중할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복지국가와 소득 재분배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현상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분배와 관련이 있음을 분석했다. 끝으로 선진 복지국가에서 사교육의 규모와 역할이 제한된 현실은 소득 재분배 제도와 관련이 있음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는 통계청,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공하는 사교육, 사교육비, 임금 격차, 소득 재분배 통계 자료와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 과잉 현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복지국가와 소득 재분배

Giervets의 정의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법적이며 공식적인 책임을 떠맡는 국가이다[19]. Giervets의 정의에서 볼 때 복지국가에서 복지 제공의 주요한 주체는 사회 혹은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공적인 기관이 법에 근거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주요한 주체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복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주체인 국가 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와 대비된다. 한편, 복지국가는 복지를 사회나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복지가 제한된 일부 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국가와 대비된다.

그런데 Giervets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의 복지국가의 정의에서 모호한 부분은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종류와 수준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복지에 관한 부분이다[19]. 그는 어떤 종류의 복지 혹은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가 기본적인 복지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인 복지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복지에 소득 보장이 포함된다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배경과 과정을 보면 소득 보장이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주요한 복지의 종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복지, 즉 소득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등장은 18세기 유럽의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산업화는 이전에도 존재했던 빈곤과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는 도시화를 가속화했고, 도시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 다수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런던의 빈곤율은 30%를 넘었다[20]. 아울러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택이 부족했다[20]. 하수도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위생이 불결했다. 면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생산시설의 증가는 대규모 산업체제의 증가로 이어졌다. 경쟁적인 상품 생산으로 발생한 공황은 대량 실업자를 양산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다수의 실업자와 도시로 몰려든 구직자로 인해 임금은 더 낮아졌다.

한편, 시장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빈곤은 그동안의 빈곤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었다. 빈곤은 나태 혹은 음주 같은 개인적인 원인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공황 같은 구조적 원인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는 주장이 점점 지지를 받게 되었다. 아울러 점

증하는 노동자 집단의 조직화, 산업화로 인한 정부의 증가, 민주주의 발전이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등장을 재촉했다[21]. 그 결과 사회 구성원의 질병과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유럽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19세기 말 이후 대부분 등장했다.

18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복지국가가 등장했지만 지구상에 현존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과 범위, 적용 대상자 범위, 수급조건,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국가마다 다르다.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 이념, 문화, 정치제도, 권력관계, 경로의존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정의하는 학자마다 기본적인 복지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 Kaufmann은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준은 최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복지수준의 차이를 줄일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9]. Marshall은 물질적인 최저의 삶의 수준을 보장할 뿐 아니라 문명화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유산에 참여할 정도의 수준으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Esping-Anderse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국가는 보수와 노동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애써야 할 뿐 아니라, 노동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생산활동과 여가활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4]. 이와 같이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보장 수준과 범위는 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복지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현존하는 복지국가들은 공통적인 속성도 갖고 있다[22]. 현존하는 복지국가들에서는 생산과정의 결과물에 대한 사적인 소유와 처분이 보장된다. 사회주의국가와는 다르게 복지국가는 시장제도를 인정한다. 그 결과 기업가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노사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인 소유와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22]. 그러므로 사적인 소유와 처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들은 분배영역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시장에 의한 일차적 소득분배에 동의한다[22].

하지만 복지국가는 시장에 의해 일차적으로 분배된 소득의 차이를 국가 차원에서 조직된 이차적 소득분배를 통해 조정한다[25].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소득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자유방임국가와의 차이점이다. 복지국가는 국가에 의한 이차 분배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실업자 등과 같이 시장에 의한 일차 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시장에 의한 일차 분배에 참여하였다더라도 그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에 의한 사회 구성원의 소득 보장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교육에 의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조정하려는 복지국가의 개입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III. 사교육과 소득 분배

1. 사교육 현실

2017년 3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1천억원이었다. 2016년 정부 예산의 4.68%에 해당할 정도의 큰 규모였다. 복지부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2.4%나 되는 규모였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두 배가 넘는 규모였고, 기초연금과 노인관련 각종 예산들의 총합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 가까운 규모였다. 한 해 지출된 사교육비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두 배가 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발생했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사교육에 사용된 비용이 노인 빈곤 해소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한국은 노인이 빈곤한 국가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2016년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8천원이었다. 2015년 대비 6.4% 증가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 학생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 해 지출되는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21조 6천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5]. 그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한 명당 지출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사교육 참여 학생 한 명당 월평균 34만원을 지출했는데, 2016년에는 37만 8천원으로 늘었다. 출생아의 감소로 학생 숫자가 줄어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매년 줄고 있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한 명당 지출은 늘고 있다는 것은 사교육비 증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6년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굉장히 높다[5]. 초등학교 참여율이 80%로 가장 높고, 중학교가 63.8%, 고등학교가 52.4%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년에 가까울수록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평균 6.0시간이었다. 전년 대비 30분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5].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월평균 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이 25.2%로 가장 높았다[5].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재정 부담이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참여율도 높다. 2016년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44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지출은 5만원이었다[5]. 소득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무려 11.2배나 됐다. 2016년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였으나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참여율은 30.0%였다[5]. 두 집단 간 참여율의 차이도 2.7배나 됐다. 결국 사교육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보다는 소득에 따른 기회의 불균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

울러 부와 빈곤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교육비의 지출과 사교육 참여율은 학생의 성적과도 연관이 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성적 상위 10 %에 드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원 정도였으나,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사교육비는 17만 5천원에 그쳤다[5]. 2016년 사교육 참여율도 성적 상위 10 %에 드는 학생들은 78 %정도였으나,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은 56 %로 크게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이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교육 동기

초·중·고등학생의 70% 정도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한국의 학부모에게 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높은 사교육 참여율에는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때의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이 반영되어 있다[7][8]. 자신의 아이만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뒤처진다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사교육 참여율에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도 반영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좋은 대학교 입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8][10]. 또한 좋은 대학교 입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키는 학부모의 태도에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고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8][13][26][27].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은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를 부추긴다.

3.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과잉 현상은 미래의 금전적 보상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사교육에 참여해서 명문 대학에 입학해야 본인이 기대하는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대기업은 항상 가장 선호하는 기업으로 꼽혔다. 2016년에는 대기업 선호율이 32.3%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는 25.6%로 공기업 25.8%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28]. 대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다. 2016년 5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의 임금 대비 4인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기업의 임금은 31.3% 밖에 되지 않는다. 대기업 대비 나머지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도 46.2%에서 65.9%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7년 이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는 사교육 보편화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표 1. 대규모 기업 대비 임금 격차[29] (단위: 천원, %)

		1-4인	5-9인	1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2007	임금액	1,276	1,951	2,339	2,781	3,747	2,179
	500인 이상 대비	34.1	52.1	62.4	74.2	100	
2011	임금액	1,505	2,261	2,666	3,237	4,460	2,527
	500인 이상 대비	33.7	50.7	59.8	72.6	100	56.7
2016	임금액	1,696	2,503	2,956	3,571	5,416	2,833
	500인 이상 대비	31.3	46.2	54.6	65.9	100	52.5

그런데 대기업이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고 해서 아무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이 선호하는 구직자는 상위권 대학의 졸업자이다[30]. 서류 전형은 할 때 상위 10개 대학 졸업자의 선호도는 48.8%,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9.3%, 지방 국립대 졸업자는 37.2%였다[30]. 반면에 지방 사립대 졸업자의 선호도는 2.5% 밖에 되지 않았

다.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의 직무 수행 적합성보다는 출신 대학이 가장 중요한 채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명문 대학교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다른 대학교의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보다 높다. 2010년 직장 취업 성과를 보면 명문 4년제 대학교의 졸업자 중에서 36.5%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했다[31].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30.2%가 대기업에 취업했다. 반면에 지방 국공립대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18.1%, 지방사립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16.6%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취업 결과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문 대학교를 졸업할 때 가장 높다. 명문 대학교를 졸업해야 대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를 말해준다.

IV. 복지국가, 소득 재분배 그리고 사교육

사교육 방식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외부터 기업형 과외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교육이 존재한다. 독일에서도 기업형 과외가 있지만 상급학년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의 과외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려는 목적의 방과 후 프로그램(SES: 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과 명문 대학 진학을 돕는 과외 형태가 동시에 존재한다.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학 진학을 돕는 사교육은 없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개념으로 국가별 사교육비 지출을 측정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교육비 규모로 국가별 사교육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시행하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국가들의 사교육 정도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PISA의 조사 항

목 중에 방과 후 활동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다.

표 2. 주당 방과 후 사교육 시간[32]

	한국	독일	스웨덴	미국
개인과외 (유료, 무료)	1.4	0.5	0.2	0.4
학원과외 (유료)	3.6	0.6	0.2	0.3
가족에 의한 과외	0.4	1.0	1.2	1.2
컴퓨터에 의한 과외	1.1	1.3	0.9	1.2

[표 2]는 2012년 PISA 조사 결과로 한 주에 사용한 총 사교육 시간을 보여준다.¹ 한국 학생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사교육을 받고 있다. 스웨덴 학생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가장 짧다. 특히 개인과 학원과외 시간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짧다. 사교육 참여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의미를 부여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독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스웨덴보다 개인과 학원과외 시간이 길다. 하지만 독일의 사교육 동기는 대학 입학 시험과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는 않다. 대학 진학 동기보다는 유급 위기에 놓인 학생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동기가 확실히 더 크다[33]. 심지어 독일에서는 대학 입학과 관계없는 실업계 중·고등학생의 30% 가량도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33]. 사교육의 동기가 대학 진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적 우수 학생이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스웨덴이나 독일 이외의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도 사교육의 역할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어 있지 않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다.

[표 2]에서 보면 근소한 차이이지만 미국의 사교육 총 시간이 독일보다 짧다. 하지만 미국의 방과 후 공부 시간은 독일보다 훨씬 길다. 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부과한 숙제를 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미국과 한국의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길다.

1 좀 더 최근 자료로 2015년에 조사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자료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과목별로 방과 후에 사용한 시간이 조사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학원과외와 같은 통상적인 의미의 사교육 참여 시간만을 별도로 구별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특별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비용과 시간은 사교육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미국의 사교육 규모도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소득 불평등(2014년 기준, 지니계수)[34]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한국	0.341	0.302
스웨덴	0.429	0.274
독일	0.500	0.289
미국	0.508	0.394

한국과 미국에서보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사교육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이유는 두 국가의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독일과 스웨덴 같은 선진 복지국가에도 존재한다. 심지어 독일과 스웨덴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기대 이상으로 크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연금이나 각종 공적인 수당과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을 받은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두 국가에서 현격하게 줄어든다. 학력의 차이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크게 발생해도 재분배를 통해 소득 조정이 있고난 후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두 나라에서 크게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학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 혹은 명문 대학 진학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습의 목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 입학 경쟁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공적인 소득 재분배 제도를 통해 누구나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이 학창 시절의 목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미래의 생계 걱정 없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독일과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재분배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명문대학 진학과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일정 규모 이

상의 기업에 취업하지 못 하는 경우 낮은 임금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시장소득 불평등은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 심지어 독일과 스웨덴보다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낮다. 그런데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이 격차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크다. 이런 사실은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와 공식 통계가 제공하는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원인은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다. [표 3]에 있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니계수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조사 방식을 근거로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상위 소득자가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작게 작성할 개연성이 높다[35]. 그 결과 실제 소득불평등 정도보다 낮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산출될 수 있다. 그래서 김낙년과 김종일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조사 방식의 단점을 보완했다[35]. [표 4]에 있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는 김낙년과 김종일이 통계청의 가계조사 방식을 보완하여 계산한 수치이다. 다른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 지수는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뽑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네 국가의 소득 불평등을 보면 여전히 한국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다른 네 국가보다 낮다. 하지만 [표 3]에서 보다는 28%나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표 3]에서 보다는 23% 증가했다. 더욱이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스웨덴과 독일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표 3]에서와 같이 [표 4]에서도 한국의 소득 재분배율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시장 소득의 불평등이 재분배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 불평등은 사교육 참여를 유발하는 동기가 된다.

표 4. 소득 불평등(2010년 기준, 지니계수)[34]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한국	0.415	0.371
스웨덴	0.441	0.269
독일	0.492	0.283
미국	0.499	0.380

[표 5]는 학력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의 차이를 보여 준다. 한국과 미국은 학력 격차에 의한 소득 차이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무엇보다 저학력자의 소득은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보다 낮다. 한국과 미국은 학력 차이에 의한 시장 소득의 차이가 큰 국가이면서,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율은 낮은 국가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에서는 소득 보장을 위해 학벌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사교육이 명문 대학교 입학에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득 재분배율도 높고, 학력 격차에 의한 소득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학사 이상의 졸업자의 소득 차이도 한국과 미국보다 작다.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한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동기가 없게 된다.

표 5. 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소득(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100)[36]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한국	스웨덴	미국
년	2013	2014	2014	2014	2012	2012
고졸이하	99	88	84	74	91	74
학사	121	125	152	145	*	160
석사이상	163	146	177	196	*	222

* 자료 없음.

V. 결론: 선진 복지국가가 주는 교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정부들은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도를 대학 입시 전형 방식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이런 대학 입시 전형 방식도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막지는 못 했다. 단지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로 바뀌었을 뿐이다[11].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도입되었지

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책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사교육 과잉 현상이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입시 제도들을 도입해 왔다. 그런데도 사교육 과잉 현상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새롭게 도입한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 못 되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참여시키지 않았을 때 학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은 자녀의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인 것이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학부모나 학생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나라 학벌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그렇다면 사교육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명문 대학교 졸업자들과 명문 대학교가 아닌 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저학력자들과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치가 부족하다. 명문 대학교 졸업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시장소득의 격차는 국가에 의해 크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 학력 차이에 의한 시장소득의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소득이 재분배된다면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 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스웨덴과 독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시장소득의 격차는 존재한다. 공식적인 통계 수치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우리나라보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오히려 더 크다. 그런데도 이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만연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 재분배 제도를 통해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소득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가 소득 재분배 제도를 통해 상당히 조정되기 때문에 고학력을 취득하려는 동기가 감소한다. 따라서 선진 복지국가에서 사교육 참여는 보편적이 아니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 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이것이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이다.

참 고 문 헌

[1] J.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과학교육사: 서울, 2007.
 [2] R. S. Peters, 이홍우·조영태 역,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서울, 2003.
 [3] 최상근, 김현진, 유균상, 류방란, 현주, 윤종혁, 나정, 양승실, 김양분, 류한구, 이희숙,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과제 2003-지정-19, 2003.
 [4] 이정연, *경향점수매칭 방법에 의한 중학생의 사교육 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 통계청,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 보도 자료, 2017.3.14.
 [6] 성낙일, 홍성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 경제*, 제10권, 제3호, pp.183-212, 2008.
 [7] 장윤옥,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와 노후준비금 지출 간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35-157, 2014.

[8] 김혜숙, 한대동, 김희복, “학부모의 사교육 지원 상에 한 근거이론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65-91, 2017.
 [9] 송성숙, 박수정, 윤지영, “다층모형을 이용한 사교육 참여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4호, pp.109-134, 2016.
 [10] 황성희, “중산층 학부모의 학교교육 인식과 사교육 선택,” *학부모연구*, 제2권, 제1호, pp.93-117, 년도삽입.
 [11] 안선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주장의 실제적 타당성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6호, pp.39-69, 2015.
 [12] 정석환, 배정혜, “한국 사교육의 존재방식,” *동아인문학*, 제36권, pp.395-427, 2016.
 [13] 이수정,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 pp.455-484, 2007.
 [14] 이경선,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pp.464-473, 2009.
 [15] 심우진, 신동일, “영어교육 열풍에 관한 시사대담 인터뷰의 서사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79-92, 2017.
 [16] 임결, 정영식, “수능인터넷 강의 선호요인 사례 분석: 학업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pp.477-491, 2010.
 [17] 김용일, “한국 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탐색,” *한국사회정책*, 제13권, 제1호, pp.49-73, 2006.
 [18] 김경년, 김안나, “사교육, 교육만의 문제인가?: 복지국가의 위험 분담과 사교육 선택의 대응 원리,” *교육사회학연구* 제25권, 제1호, pp.29-50, 2015.
 [19] Harry, K. Girvetz, “Welfare Stat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6, pp.512-521, 1968.
 [20] Ritter Gerhard A., *복지국가의 기원*, 전광석 역, 서울: 범문사, 2005.

[21] Alber, Jens, Vom Armenhaus zum Wohlfahrtsstaat: Analysen zur Entwicklungen der Sozialversicherungen in Westeuropa, Frankfurt: Campus, 1984.

[22] Kaufmann, Franz-Xaver, Herausforderungen des Sozialstaates, Suhrkamp: Frankfurt am Main, 1997.

[23] Marshall,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Santa Barbara: Praeger Frederick, 1964.

[24] Esping-Andersen,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25] Alber, Jens, Wohlfahrtsstaat Sozialstaat, D. Nohlen (ed.), Kleines Lexikon der Politik, München: Beck, 2001.

[26] 김경근,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과외수요 창출요인,” 우천식(편): 사교육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17, pp.281-312, 2004.

[27] 우천식, “사교육비 문제의 이해: 접근방법과 주요 분석결과,” 우천식(편): 사교육 효과, 수요 및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17, pp.7-51, 2004.

[28] 한국경제연구원, 대학생 취업인식도 설문조사 보도자료, pp.1-6, 2017.10.20.

[29] 노민선,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17권, 제13호, pp.1-10, 2017.

[30]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의 청년 채용시장: 서류 전형 단계,” KRIVET Issue Brief, 제112호, pp.1-4, 2016.

[31] 오호영, “대졸자의 선망 지강 취업스펙과 정책과제,” The HRD Review, 제67권, 제6호, pp.78-101, 2013.

[32] OECD, PISA2012 Results: What Makes Schools Success-Resources, Policies and Practices Volume IV, 2014.

[33] Koninzer, Thomas, “supplementary education in Germany: History and Present developments,” in: Out of Shadows-the Global Intensification of Supplementary Education. Published Online, 2014.8.20., pp.209-220, 2014. [https://doi.org/10.1108/S1479-3679\(2013\)0000022010](https://doi.org/10.1108/S1479-3679(2013)0000022010).

[34]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2017.12.5>.

[35] 김낙년, 김종일,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2호, pp.1-50, 2013.

[36]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2016.

저 자 소 개

이 신 용(Shinyong Lee)

정희원



- 1991년 2월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2003년 7월 : 독일 브레멘대학교 사회정책학 석사
 - 2006년 7월 : 독일 브레멘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사회정책연구센터장
- <관심분야> : 한국사회복지 역사와 발전론